성 명 서

노벨상 취소 청원 시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故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시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

故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납치와 구속, 사형선고, 망명 등 셀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故김대중 대통령의 헌신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는 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우리나라의 국격을 세계속에 우뚝 세우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를 통해 꽃피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가적인 영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당시 국가정보원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시도는 전 국민을 분노와 배신을 넘어 말할 수 없는 충격 속에 빠뜨렸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앞장서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모욕하고 그 희생으로 뿌리내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유린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는 민중의 힘으로 이루어 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정보원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고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故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시도는 역사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故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노벨상 취소 청원 시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로 관련자를 엄벌하라!!
- 국가정보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에 엄중 대처하라!!!

2017년 10월 10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